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1월 11일

## | 금주의 이슈 |

- I. 트럼프행정부의 新안보전략 평가 / 3
- II. 공적연금 개혁의 두 가지 길 / 7
- III.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3



## 금주의 이슈

■ 금주(1월 첫째 주)는 안보·복지·교육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트럼프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에 나타난 新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노인빈곤해소·후세대부담완화·차별적 연금구조 개혁을 위한 공적연금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제3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 제1편 : 트럼프행정부의 新안보전략 평가

- 지난해 12.18일 공개된 트럼프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美·中 間 經 濟 · 안 보 經 쟁 과 북 · 미 間 갈 등 이 심 화 될 것 으 로 판 단 됨. 특 히, 한 중 정상 회 담 에 서 의 ‘3 NO(不) 원 칩’은 新 안 보 전 략 의 한 · 미 · 일 MD 체 제 강 화 와 배 치 될 뿐 아 니 라 미 국 의 ‘인 도 · 태 평 양 구 상’ 과 도 배 치 된 다 는 점 에 서 한 미 동 맹 의 심 각 한 휘 손 이 우 려 됨

### ■ 제2편 : 공적연금 개혁의 두 가지 길

- 심각한 노인빈곤의 개선뿐 아니라 후세대 부담 완화와 차별적 연금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수임. 기초연금의 전면적 확대, 그리고 특수 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2가지 개혁방안을 공적연금의 전면적 개혁방안으로 제시함

### ■ 제3편 :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불충분한 여건 아래 확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저소득층 학생의 성장과 계층 상승을 지원하는 진학사다리 구축의 통로로 그 기능이 적극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2018. 1. 11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 I. 트럼프행정부의 新안보전략 평가

작성: 안보통일센터 ☎02-6288-0547

지난 12.18일 美 트럼프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新안보전략이 공개된 가운데, 향후 미국과 중국간 경제 및 안보 경쟁, 북·미간 갈등의 심화 등이 예상됨. 특히,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약속한 ‘3 NO(不) 원칙’은 新안보전략의 한·미·일 MD체제 강화와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

## 1. 현황

- 트럼프행정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발표(17.12.18)
- 트럼프행정부는 핵무력의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의 핵위기가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판단
  - 과거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의 대북정책 불계승 및 어떤 식으로든 북핵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평가
  - 특히, 68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북한’ 표현이 무려 17차례나 등장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
- 트럼프대통령, 워싱턴 DC 소재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연설(12.18)에서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재차 밝힘
  - 강력한 어조로 “북핵문제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강조
  - 또한, “대북압박을 위해 경제제재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

## 2. 주요 내용

-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한 경쟁국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

- 지난 1년간 트럼프대통령이 푸틴대통령과 시진핑주석에 대해 다소 우호적으로 접근했던 것과는 다름
  -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 중·러를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규정
  - 이는 美 역대정부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여전히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
- 한국에게 가장 핵심적 사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강력한 해결 의지 천명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에 협력할 것” 명시
  - 이는 북한이 미사일의 수와 종류, 그리고 효율성과 사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 그에 따른 대응옵션으로 다층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 또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프로그램 등의 방어를 위해 국제적 대응과 공조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
- 이와 함께, 북한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미국의 선택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
- 이에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향상을 밝힘
  - 이는 미국이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상봉쇄와 원유공급 추가 제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3. 평가

- 신안보전략보고서는 트럼프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 트럼프행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대북 옵션, 즉 ①외교적 협상 및 압박, ②중국을 통한 해결, ③군사적 옵션(예방타격, 참수작전, MD 강화 등) 등을 제시해 왔음
- 트럼프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초가 큰 틀에서 구체화된 만큼 앞으로 미국과 중국간 경제 및 안보 경쟁, 북·미간 갈등 심화 등이 예상
- 특히, 신안보전략에서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한·미·일 MD체제 강화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간 약속한 ‘3 NO(不) 원칙’과 배치

※ 3 NO 원칙 : 사드 추가배치 계획 없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안함,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 안함

○ 또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정부의 균형외교 구상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 한중정상회담에서 文대통령이 중국의 一帶一路 구상을 지지, 그러나 최근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요청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배치된다는 게 문제

- 현재 우리정부 입장은 미국의 구상과 중국의 구상 모두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애매한 줄타기가 오히려 더 위험

※ 미·중과의 균형외교는 한미동맹이 엄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것이 오히려 미·중 양측으로부터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Tillerson장관의 북한 급변時 미·중간 논의내용에서 보듯이 文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또한 한반도정세의 국제화 속성상 한계가 불가피해 보임

- Tillerson 국무장관은 “미군이 WMD 제거를 위해 DMZ를 넘더라도, 38선 이남으로 즉시 후퇴할 것임을 중국측에 약속했다”며 양국간 논의내용 언급

- 이는 한편으론 중국이 우려하는 중국군과 미군이 국경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사시 미군이 북한 핵무기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내륙으로 진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 II. 공적연금 개혁의 두 가지 길

### : ‘100만원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하나로’

작성: 김형모 (『누가 내 연금을 죽었나?』 저자)

공적연금의 장기적, 근본적 개혁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100만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하나로’가 있으며, 모두 차별적 특수직역연금 폐지로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및 후세대 부담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보편적 노후보장 강화로 최악의 노인빈곤 해결을 꾀함. 두 방안 중 재원을 조세로 변경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확대한 ‘100만원 기초연금’이 연금통합 방안인 ‘국민연금 하나로’보다 급진적이며, 여전히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親서민적임. 공적연금 개혁은 서민적 보수를 표방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전환과 지방선거-총선-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적 정책과제로 보다 많은 관심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1. 연금 개혁의 목표

#### ○ 노인빈곤의 해결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약4배(2015년 OECD 보고서)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세대에 대한 배려 전무(2016년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8.1% 불과)
- 국제기준으로 기초연금 아닌 사회부조로 분류되는 현행 기초연금으로는 당면한 노인빈곤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 평등하고 보편적인 연금구조 확립

-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고임금·장기근속,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한 사용자 보험료 부담, 높은 수익비 등을 바탕으로 특권적 고액 연금 향유
- 2015년 4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이 15조 1,840억원, 57만명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게 19조 3,506억원 지급
- 2015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액만 4조 4,158억원에 이르는 등 일부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를 혈세로 보장

#### ○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해소

- 2016년 국가부채 1,433.1조원의 52.6%인 752.6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
- 국민연금 역시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60년 고갈 우려 및 막대한 재정부담 불가피

#### ○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 2016년 기준 지역가입자 납부유예 417만명, 직장보험료 누적 미납액 2조 2천165억원,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 존재

#### ○ 연금재원의 보편성과 누진성 확대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보험 가입자에 한해 재정 부담
  - 2015년 종합소득 총 수입금액 944조 5,103억원 중 60세 이상이 약 17% 차지, 미성년자 역시 상속·증여 통해 상당한 자산 및 소득 창출
-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정률(9%) 부과로 누진성 결여
  -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449만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40만 4천원(449만원의 9%)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2. 연금 개혁의 두 가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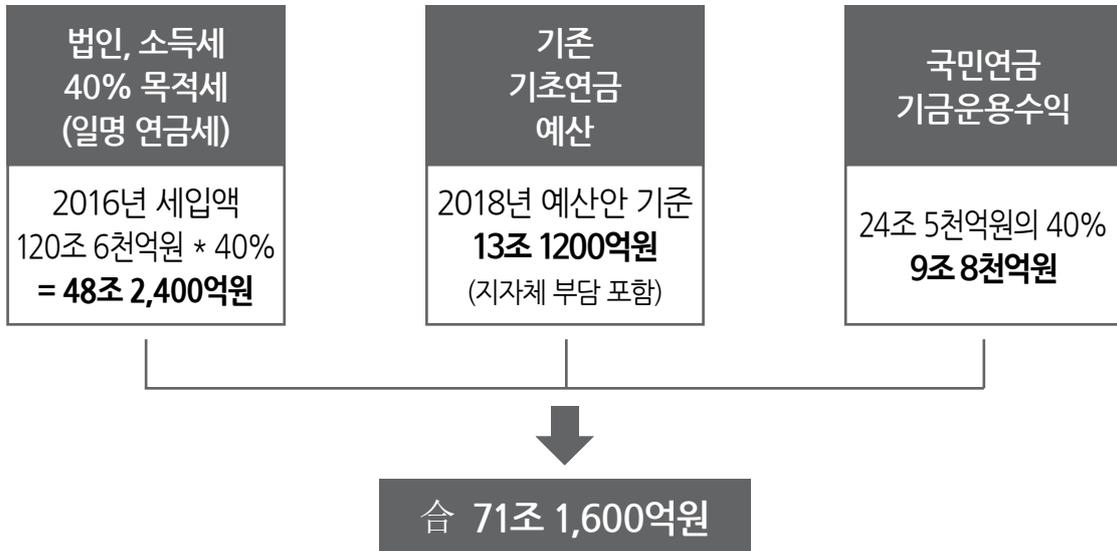
### □ 첫 번째 길 : 기초연금 전면 확대 ‘100만원 기초연금’

- 현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전면 도입
  - 재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목적세인 가칭 ‘연금세’ 신설과 현행 기초연금 예산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sup>1)</sup>으로 구성
- 새로운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와 추산액
  - 최대 기초연금액은 1,190만원<sup>2)</sup> (월99만 1,670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
  - 하위 50% 전액, 상위 50% 소득별 차감 지급(최대 50% 감액), 부부 동시 수급자는 현행 기초연금과 같이 20% 감액

1) 201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은 24조 5천억원이지만 퇴직연금 전환, 반환일시금 등을 고려해 40% 수준인 9조 8천억으로 산정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11호에 따른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 소득100만원 기초연금 시행 자원



### 연금지출액 추산(부부수급 46% , 단독수급 54% 가정시)

구분	기본 연금액 (원)	단독 수급자 (명)	지급 예산 (a)	기본 연금액 (원)	부분 수급자 (명)	지급 예산 (b)	a + b
하위 50%	1,190만	197만 2천	23조 5천억	1,190만	168만 3천	16조원	39조 5천억원
상위 50% (평균)	892만 5천	197만 2천	17조 6천억	892만 5천	168만 3천	12조원	29조 6천억원
<b>합계</b>							<b>69조 1천억원</b>

- 현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공단으로 전환
  -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선 기 납부 보험료를 신설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하거나 순차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sup>3)</sup>
- 노인빈곤의 획기적 해결과 서민부담 감소
  -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3) 반환일시금 지급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혼란 우려, 연령별 등으로 구분해 10~15년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함.

- 현재 다수 국민들에게 소득세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큰 부담
-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유리
  - 법인세는 이윤에만 부과하지만 사회보험료는 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이상 계속 부담
- 현재의 연금수급자 정산
  - 기 납부 보험료와 기 수급 연금액 산출하여 정산처리<sup>4)</sup> 후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자로 전환

### □ 두 번째 길 : 연금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 국민, 공무원, 교사 등 모든 국민을 동일한 국민연금 체제 구축
  - 기 납부 보험료 국민연금 방식 환산, 향후 연금 국민연금이 지급
  - ‘연금상한제(예: 전체근로자 중위소득)’ 도입으로 고액 연금 수급 원천 차단
  - 소득상한액(449만원) 대폭 인상 통해 고소득자 보험료 적정 납부 체제 구축
-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산출 방식 변경 : 소득상한액과 상관없이 가입자 실제 소득 반영 산출(A값 상승)
  - 보험료 납부 소득상한액 인상, 가입자평균소득 산출방식 변경, 공무원·교사 등 고소득 가입자(약160만명) 확대 통해 국민연금 A값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급액이 증가하며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 누리게 됨
- 수급자에 대한 재정부담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공무원·군인 연금 총당부채 문제 해결
  - 소득상한액 인상과 연금지급 상한제 도입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 현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의 차액 보험료율(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17%)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 연금체계 운용, 국민연금에 더하여 추가 연금 지급

---

4) 기 납부 보험료가 은퇴 후 받은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지급하거나 신설 퇴직연금계정으로 전환, 수급 연금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하지 않고 종결처리.

### 3. 연금 정치(Pension Politics)

- 2018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발표되면서 연금문제가 크게 이슈화될 전망
- 문재인 정부 및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고소득 가입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재정부담의 대폭증가가 불가피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약화
-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대세력’만 동원(mobilization)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초연금 전면 확대 또는 국민연금으로의 일원화는 광범위한 ‘지지세력’ 구축 및 동원 가능

#### 현행 제도와 연금 구조개혁안별 특성

특성 \ 제도	현행 제도	기초연금 전면확대	국민연금 일원화
지급대상	연금가입자 중심	모든 노인	연금가입자 중심
지급특성	공공高, 민간低 (소득별 격차大)	비기여연금 (저소득 보장大)	공공-민간 격차 해소 (국민연금혜택大)
지급금액	공공 2~300만원 국민 32만원 기초 20만원	기초50~100만원 + 퇴직연금	국민연금 상향
현 노인빈곤	해당없음 (소액 기초연금)	현 노인빈곤 획기적 개선	해당없음 (소액 기초연금)
재원규모 <sup>5)</sup>	70조원	61.3조원	현행보다 다소 증가
재원범위	18~59세 보험가입자 (고용주)	소득있는 모든 국민+법인	18~수급전 보험가입자(고용주)
징수특성	정률부과, 상한有 (사회보험)	누진부과, 상한無 (조세)	정률부과 상한액 대폭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없음	존재(감소)
연금충당 부채	증가	해결	감소
장기적 지속가능성	低	高	中
기타특성	제도별 격차大 역진적 복지	보편+맞춤형 퇴직연금 활성화	특수직역 부가연금 시행

5)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 기초연금예산으로 기금운용수익은 제외. 공무원 등의 퇴직적립금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음.

### III.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작성: 노명순 연구위원 ☎02-6288-0525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저소득층 학생의 성장과 계층 상승을 지원하는 진학사다리 구축의 통로로 그 기능이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함

#### 1. 문제 제기

-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도입과 확대
  -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인재양성과 배치된다고 하여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 사정관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확대 하였음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학종으로 개편하여 고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학종 확대에 인한 부작용 속출
  - 다양한 비교과 영역이 평가에 포함되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무엇보다 대입전형을 통한 사회불평등 재생산 우려 확대되고 있음
  -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성'인데, 학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고교 유형, 출신 지역, 교사의 역량, 사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전형방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종은 현대판 음서제 이자 연좌제로 전락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은 지속적 확대 입장
  -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여러 비판 속에서도 학종의 비중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중앙일보, 2017.12.13.)
- 이에 제기되고 있는 학종의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주요 현황

- 학종 대폭 확대, 정시 대폭 축소되는 경향
  -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 74%,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25만8920명) 중 학종은 32.3%(8만3553명)로 역대 최대
  - 수시 비중, 학종 비중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
- 서울 주요 대학은 학종이 대세
  - 전체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종 비율은 과도하게 높은 편
  - 2018학년도 학종은 전체의 23.6%이지만, 서울 주요 대학 모집정원의 약 45%가 학종
  - 서울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특징 : 학생부교과전형 폐지, 학종 대폭 확대, 정시 대폭 축소
- 이와 달리 수험생이 바라는 대입정책은 “수시 줄이고 정시 강화”
  - 수험생 70%가 정시 강화 찬성, 수시 비중 현행 유지 반대<sup>6)</sup>
  - 학종 축소에는 59.7%가 찬성
  - 수험생들은 학생부에 의한 평가보다는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3. 학종의 문제점

- 사교육비 증가
  -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종(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5%)을 1순위로 지적<sup>7)</sup>
-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금수저전형’
  - 학종에서는 교과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비교과 성적(비교과 기록도 일종의 성적임)이 더 반영되고 있음

6) 입시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이 2017년 4월, 대입 수험생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정시 강화 69.8% 찬성, 수시 비중 현행 유지 70.5% 반대, 수능 비중 축소 72.7% 반대로 응답함(응답자 486명).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으로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응답자 24,912명)

- SKY대학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국가장학금 미신청자, 9-10분위 인원을 합친 비율)이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sup>8)</sup>
- 수시모집의 100%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 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형 결과 예측이 힘든 ‘깜깜이전형’
  - 당락 기준 불분명하여 합격과 불합격이 어디서 갈리는지 수험생은 정확히 알기 힘들
-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전형’
  - 학종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학생의 입시 결과 바뀔 수 있음<sup>9)</sup>
  - 학교 내신 성적이 학교마다 다르게 반영(사실상 새로운 의미의 고교등급제로 변형될 가능성 상존)
-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장점이 집중되는 ‘불공정전형’
  -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학생부를 특별히 관리해주는 경향 일선 학교에 존재
  -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는 학종 도입 이후 학교가 일부 최상위권 학생에게만 신경쓴다는 피해의식 감지
-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경쟁의 본질을 대체
  - 성적이 아닌 학생의 생활이나 인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일견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되면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sup>10)</sup>

## 4. 정책적 제언

### □ 기본방향: 서민·저소득층 학생의 성장과 계층 상승 지원하는 진학사다리 구축

- 대입전형을 통해 사회불평등 재생산을 방지하고, 서민·저소득층 학생의 개인 성장, 계층 상승을 지원하는 진학사다리 구축 필요

8) 국민일보,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2017.2.9).

9) 2016년 5월,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5%(응답자 385명)가 그렇다고 응답함.

10)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바람직한 인간인가 등을 평가하여 대입 기회를 준다고 할 때, 결국은 자신을 잘 포장하는 위장술과 위선이 교육현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임.

- 국·공립대학은 고른기회전형, 지역인재선발전형을 모집정원 중 50% 이상 선발에 적용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입학 사전·사후 지원 확대
- 전형 유형 축소, 전형 구분 명료화, 전형방식 투명화하여 실질적으로 대입제도 단순화

#### □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과제

- 학교별 최대 20% 이내로 학종의 적용 비율 축소 조정
- 학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에 제한적으로 적용
  - 교육소외계층(사회적 배려자)을 우대(적극적 차별)하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한정하여 운영
-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
  - 학생부 기록 부정 시 처벌 강화, 비교과·서류 반영 최소화, 세부전형기준까지 완전공개, 전형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화, 부정의혹 대학 전면 감사

#### □ 수능제도의 개선과제

- 수능절대평가 시행 유보
  - 절대평가는 수능 변별력 약화, 무력화 우려
-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대입전형의 기조로 운영
  -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준에서 정시와 수시의 균형 유지
- 창의형 수능 시험으로 제도개선 추진
  - 적정 난이도 유지, 고급사고력·창의력 중심 출제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http://www.ydi.or.kr)

---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